

제1장 서론

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

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

제3절 추진배경

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

1. 연구 목적

-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34조(재활용단지의 조성 등)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
- 정부는 재활용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 자원순환 거점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고, 이와 연계하여 충청남도 내 재활용산업의 업종별, 시·군별 분포·특성 등의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여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의 타당성 검토 및 방향성 설정 필요
- 재활용산업을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고, 자원순환 특화단지 내 물류시설의 공동 활용,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, 공동연구개발, 정보교류 등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
- 정부와 지자체 공동 참여하에 재활용산업을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(Eco-Recycling Center)를 조성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C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육성정책 반영
- 단지 내 물류시설 공동활용, 환경오염물질 공동처리,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확보에 기여
- 이를 통해 정부의 재활용산업 육성정책에 부합되도록 충청남도의 재활용산업 특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단지조성의 필요성 및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

2. 필요성

-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
- 폐자원 및 중간제품의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 대폭 절감
 - 실증된 재활용기술의 효과적인 적용 및 확산(고급 재생유 생산기술, 혼합폐플라스틱 자동 분리배출 등)
 - 천연자원 부족 및 고유가 시대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재활용산업단지조성 기반구축이 필요
- 충청남도 내 재활용관련 업체의 70%가 10인 이하,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
- 재활용제품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신규제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 강화와 폐자원 및 중간제품의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 절감 필요
- 재활용관련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 및 확산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
 - 폐자원 금속류 회수, 고급 재생유 생산기술, 혼합 폐플라스틱 자동 분리배출 등 다양한 자원화 기술의 실증 적용
- 자원 가격 상승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 구축 필요
 - 모든 폐자원은 재활용되어 제품원료 사용가능함으로 원자재 수입 대체 효과

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

1. 지역적 범위

- 충청남도 전 지역

2. 시간적 범위

- 기준년도 : 2012년
- 목표년도 : 2017년
- 사업년도 : 2015 ~ 2020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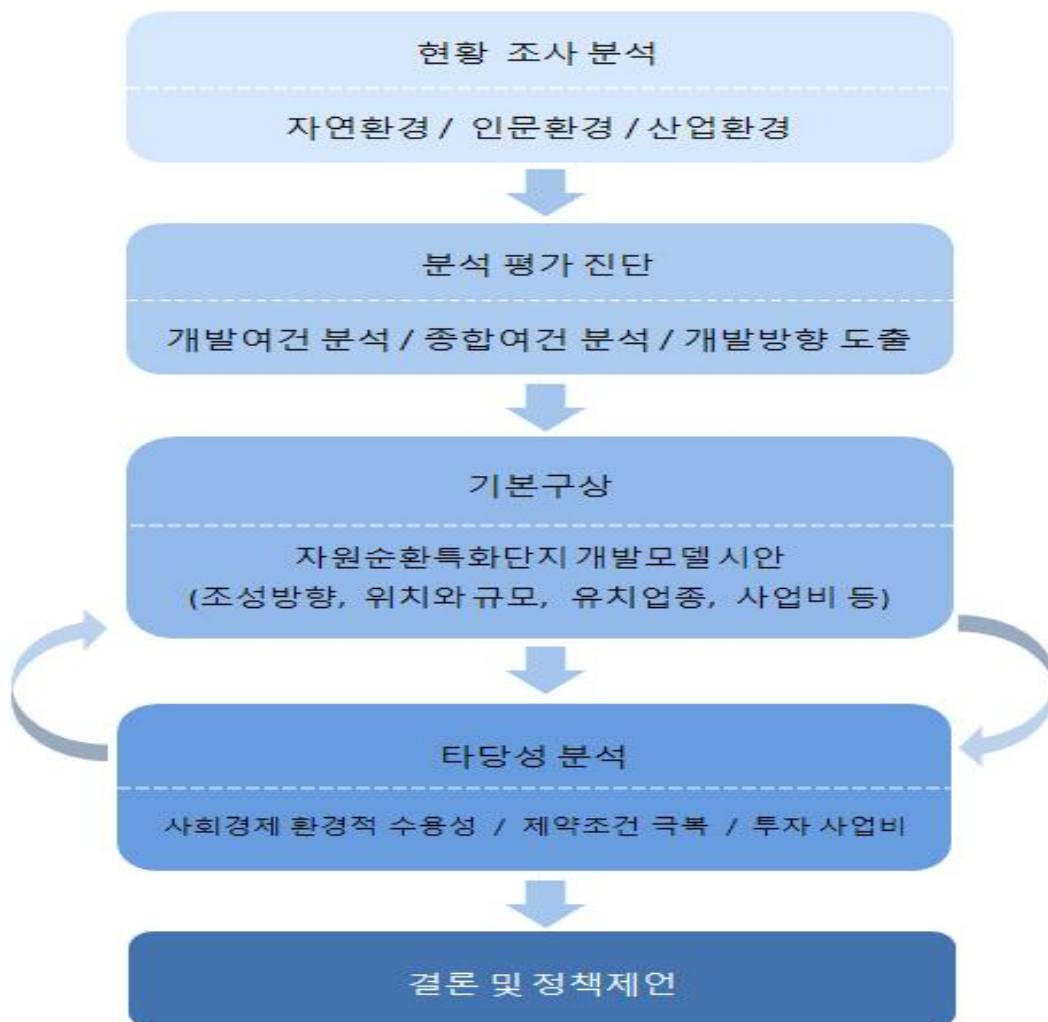
3. 내용적 범위

- 현황조사 분석
- 분석, 평가, 진단
- 기본구상안 작성
-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

4. 연구의 흐름체계

- 현황조사 분석은 자연환경, 인문환경, 산업환경조사는 도 및 시군별 종합계획 수립 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, 산업, 지역경제, 도로, 철도,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프라를 검토

- 공간·환경·사회적으로 비슷한 여건을 지닌 권역별로 연계하도록 토지이용계획, 산업단지계획, 생태산단 조성계획 등 관련정책과 연계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평가진단 방향 설정
- 재활용시설 및 업체 집적화 보다 다양한 유형을 설정하여 실현가능성 중심으로 특화단지 구상을 추진하여 기본구상안에서 제시한 유형별 특화단지에 대한 사회·경제·환경적 특성 검토를 통해 실행가능한 대안 도출
-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폐기물 자원화(재활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,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) 방안과 연계하여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화·과학화 방안검토



[그림 1-1] 연구흐름도

제3절 추진 배경

1. 법적 근거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(재활용단지의 조성 등)
- 주요 유치업종
 - 국책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적용업체
 - 재활용률은 낮으나 폐기물처리(감용)효과가 큰 품목(플라스틱 등)
 -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는 재활용업체 등
-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4조 (자원순환의 촉진)
 -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·지원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설정함
 -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
 - 자원의 수급 및 관리
 - 유해하거나 재제조·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
 -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·재활용 등 재자원화
 -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, 식물,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·활용
 -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
 -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·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
-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4조 (녹색기술·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조성 등)
 -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,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7조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행령 제2조1항, 3항

-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, 158조
- 이러한 법령에 의해 재활용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조성자로 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%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재활용단지의 관리·운영권은 시·도지사, 한국환경공단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
- 기관별 역할로 환경부는 재활용단지 승인 및 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국고지원, 한국환경공단은 조성에 관한 실무사항을 위탁받아 단지 조성계획 수립, 단지의 관리운영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함
-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조성비 제공, 단지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협조 등이 있음

2. 정책 근거

- 국가정책 반영
 - 저탄소/녹색성장 실천계획 등 국가 정책반영을 위한 에너지 자원화 제반시설 확보
 - 전처리 선별 등 유효자원화 최대한 선별 회수
- 폐기물의 자원화
 -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유가 금속류 회수
 - 우수한 품질의 재생자원 생산
- 운영효율의 극대화
 - 투자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효율의 극대화 방안 모색
 - 운영수익 창출로 시설 운영비 감소 및 시설 투자비 회수가능성 검토

3. 기대효과

-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측면
 - － NIMBY현상 등 부지확보문제 해소로 재활용산업육성 기반구축
 - － 업체간 계열화 및 연계효과, 기술·정보의 교환에 따른 제품의 품질향상 및 구매촉진 증대
 - － 공동시설 설치·사용에 따른 투자비 및 생산비용 절감으로 생산성·수익성 향상
- 사회·경제적 측면
 - －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
 - － 재활용업체 단지화로 폐기물·폐수의 공동처리 및 물류비용 절감
- 환경적 측면
 - － 재활용업체 집단화로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처리
 - － 한정된 자원의 고갈방지, 매립지 수명연장, 국토환경보전에 기여
 - － 매립 및 소각에 의존하던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등

4. 추진 절차

